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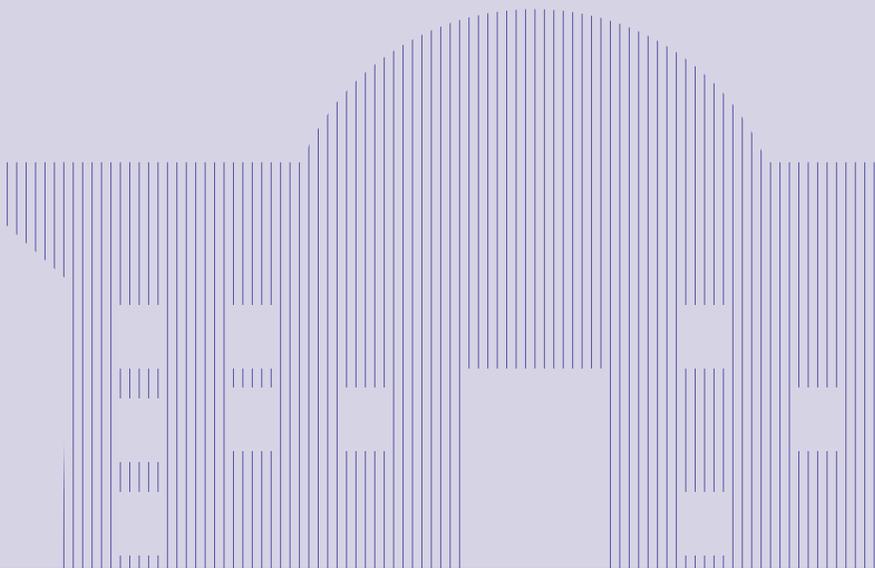
2024.05.30

국회미래연구원 | 연차보고서

제22대
국회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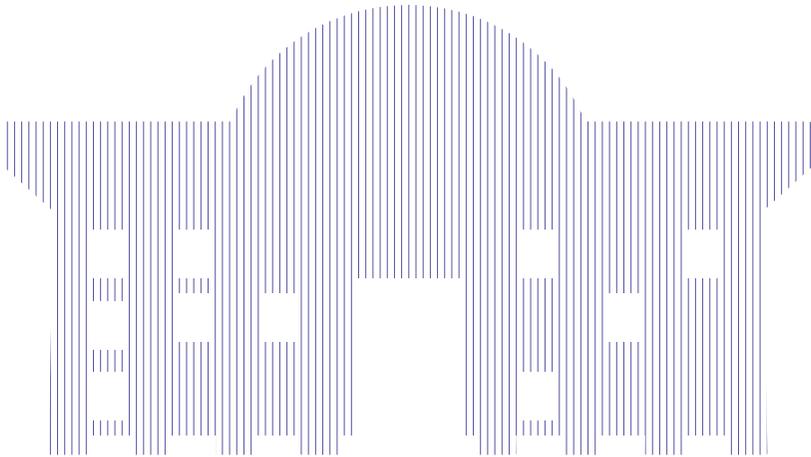
2023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NAFI ANNUAL REPORT 2023



2023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NAFI ANNUAL REPORT 2023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발간사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 입법활동과 정책방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획을 강화 하였습니다. 국회 미래의제 연구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소속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회 내외부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국가 차원의 주요 이슈를 국회 구성원과 정부부처 및 각계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예측·분석 및 국가적 차원의 6대 아젠더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미래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사·분석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여 증거 기반의 데이터 중심 미래연구를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공모전과 포럼을 개최하며, 데이터가 국민 행복연구와 정책 및 법률 입안과정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사업과 주요 활동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성과가 국회의 정책 및 입법과정뿐만 아니라, 국민 들의 미래 문해력을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명실상부한 국회의 싱크탱크가 되기 위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미래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목차

발간사 03

I. 2023년 연구성과 06

- 1. 연구사업 추진방향 08
- 2. 연구과제 목록 09
- 3.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10
- 4. 연구실적 목록 42

II. 2023년 주요 활동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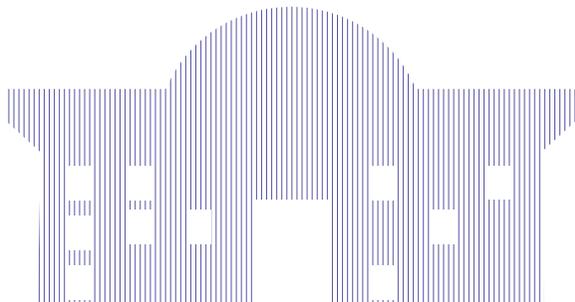
- 1. 주요행사 48
- 2. 미래기고 54
- 3. 언론보도 57

III. 2024년 연구사업 58

- 1. 연구사업 추진방향 60
- 2. 연구과제 목록 62

부록 63

- 기관소개 64
- 조직 및 인원 66
- 연혁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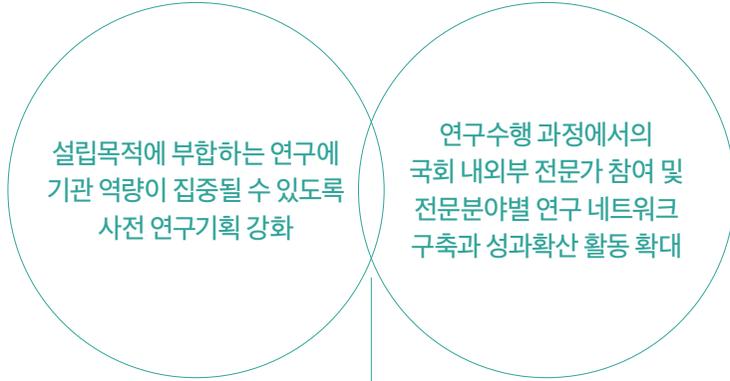


2023년 연구성과

1. 연구사업 추진방향	08
2. 연구과제 목록	09
3.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10
4. 연구실적 목록	42

1. 연구사업 추진방향

추진방향



- 중점연구** 미래사회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예측·분석 및 국가적 차원의 아젠더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추진
- 연구기반** 미래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사·분석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체계 마련
- 성과확산** 미래연구 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소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활동 확대

주요 추진사항

추진사항	주요내용
미래예측 및 분석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미래전망 및 전략 분석 노하우를 활용한 미래전망 연구결과 제공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소수 인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된 미래연만의 특성을 살려 다학제적인 미래연구로 정부 출연연 등 타 연구기관과 차별화
국회 미래의제 지원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발굴·분석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내 미래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수시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브리프형 보고서로 적시에 제공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국민 대상 조사분석 데이터 축적 및 정부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설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추진
성과확산	국회·정부·국민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매체 다변화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2. 연구과제 목록

사업명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중점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여영준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민보경
	국민 주거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택 부문 중장기전략	이선화
	노동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정혜윤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박현석
	순환경제 국가 중장기 전략	김은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략 연구	정 훈
	중장기 국제전략과 의회외교	차정미
국회 미래의제 지원	국회상임위원회 주요 미래의제 분석 연구	유희수
	국회 미래의제 수시 연구	유희수
연구기반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민보경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박성원
	한국인의 행복연구	허종호
성과확산		
성과확산	연구기획 및 지원	유희수
	연구 성과확산	김병수

3.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기본보고서

연구보고서 23-01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연구책임자
허중호

연구배경 및 목적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이다. 해외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의 시대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행복이 양질의 삶,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각 국가 단위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하였다.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137여 개국 중 57위: World Happiness Report 2023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희박하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자 기관 설립 초기부터 노력하여 왔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2023년 수행한 3차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로, 조사의 개요 및 2023년 기준 대한민국 7,500가구 대상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부분, 정서 부분, 삶의 만족도, 사회심리적 변인, 일상재구성 문항, 여가활동 및 거주와 이동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의 수치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 수준에 대한 대표적인 문항인 전반적 행복감 10점 만점 기준 평균 6.56점으로 전반적 행복감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밝히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더불어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 자료가 되며,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에서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 4개년 트렌드 분석 보고서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2020년 예비조사부터 2023년 수행한 3차조사까지 결과의 트렌드를 살펴본 분석 보고서이다. 본 4개년 트렌드 보고서로 한국인의 행복은 어떠한 방향의 변화를 겪어 왔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전반적 행복감을 포함한 행복 관련 수치인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수준은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긍정 및 부정 정서 영역과 더불어 대부분의 문항의 결과가 소폭 상승, 전년 동, 지속 하락 등으로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었다가 최근에 사회경제적 규제 및 감염격리 해제 등이 진행된 지 1년이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행복 수준의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변수별로 상승과 연속 하락 등의 추세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행복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집단별로 불평등의 심화를 추적하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개인의 삶 관점 미래 사회 전망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미래 예측 접근 기반 미래 전망 연구 체계 수립과 연구방법론 상호결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사회와 개인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축인 '지능형 기술 발전'과 '생활공간 변화' 관련 주요 동인을 탐색하고, 동인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함으로써, 시나리오 기반 전략과제 탐색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 관점에서 미래 전망을 이뤄내고, 다양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안 탐색을 이뤄내고자 한다.

주요내용

미래 전망을 위한 주요 연구 단계는 ① 미래 질문 설정, ② 미래 환경변화 동인 탐색, ③ 동인 간 상호관계 분석, ④ 핵심 동인 추출과 미래 시나리오 탐색, ⑤ 미래 시나리오 해석 및 전략적 대안 탐색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연구 단계 수행을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론(정량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고 연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환경 변화 동인과 이슈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마주할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탐색하고, 개인의 삶 관점에서 미래 사회 모습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에 대한 탐색은 수동적인 미래에 대한 대응을 넘어, 능동적 미래 설계를 가능케 한다. 우리가 어떠한 미래 경로를 밟아 나가야 할지에 대해 개인,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사회와 개인의 모습은 ①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속, 종속적 개인', ②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속, 자기주도적 개인', ③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 각자도생의 개인', ④ '지능형 솔루션주의 사회 속, 고립된 개인' 등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그러본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속, 시나리오별로 파악된 기회와 위험 요소를 근거로,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정책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미래 예측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다양한 경로의 미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책임자
민보경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의 인구위기는 향후 미래사회에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성장시대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취약성 심화,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인구 위기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삶의 질 제고 방안과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이슈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으며, 단순히 인구의 양적 팽창을 위한 전략보다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지역소멸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어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외국인력 활용되고 있으나 외국인력 관련 범위 불분명 및 현황 파악 불가능, 인력수급의 불안정, 임금체불, 안전관리 수준 미흡, 생활 곤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압박 등 인구변화에 따라 기존의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 불가피하며,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응전략)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완화전략)의 병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으로서의 인구유입을 위해 매력적인 거주지로서의 농어촌 조성 전략, 지역맞춤형 귀농귀어 모델 개발, 지역-대학-산업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농어업 전문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 체류 및 관계 인구 등 활용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의료자원 확충,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스마트 농어업 및 농어촌 구축, 사회적 경제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접근, 인구감소 적응 및 도시규모 적정화 전략 등을 제시한다.

연구책임자

정혜윤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정치가 이루어지는 주요 현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노사민정') 사례로서 광주형 일자리를 분석한다. 민주화 이후 노동이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며 노동정치 연구가 늘었으나 규범적 당위를 강조하는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대상과 거리를 둔 사례분석이 필요하지만 본격적인 실증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출발한다. 중앙 노동정치의 현장인 경사노위와 환노위는 제도, 사람, 활동이란 세 차원으로 협의체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 지역 노사(민)정체제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형 일자리'는 중앙과 또 다른 지역 노동정치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크게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경사노위의 제도적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며, 3장에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동·사용자·정부·공익위원의 인물정보를 통해 회의체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경사노위의 활동의 결과(합의, 권고, 제안)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환노위 역사와 함께 제13대부터 20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환노위위원의 특징을 규명하고, 6장에서는 환노위에 발의되고 가결된 노동법률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7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기획 단계와 협약 단계가 분리되며, 어떻게 '노동 없는 일자리' 사업의 출현이 가능했는지 정치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8장에서는 각 장의 분석을 요약하고 한국 노동정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재구성했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 '노동정치'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문제의 틀을 전환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할 수 있는 관점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했다. 노동정책 결정 공간의 조직/제도 사람과 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향후 깊이 있게 질문하고 다루어야 할 질문과 주제를 부각하고자 했다.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표준화,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는 순환경제 모델이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을 대체하는 주요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들은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순환경제 전략이 중요하며, 녹색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으로도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미래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데에 있어 인적·물적·자원 규모에서 취약한 국내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증시되나 국내 순환경제 정책 내용에서 글로벌 혁신전략과 기술·산업 중장기 투자전략이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정책 여건 변화 및 기술·해외직접투자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취약점과 기회요인을 식별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

분석결과 국내 취약점으로 국제표준화 논의에의 참여 부족, 표준화 기관의 파편화된 정책 거버넌스, 지속가능 금융 및 녹색투자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 지원 부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및 주도성 부족, 글로벌 지식재산권 네트워크에서의 낮은 영향력, 제한적인 해외직접투자 대상 산업 및 해외투자 전략의 불확실성이 도출되었고, 기회요인으로는 ESG 투자 등 새로운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확립 기회, 국제표준 적시 대응을 통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등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확장, 순환경제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선진기술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 확장 및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표준화·인증,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부문에서의 혁신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정책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 ① 국제표준화, 인증 - 에코디자인, 배터리, 플라스틱, 디지털제품여권 등 빠르게 변화는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참여하는 한편 그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적 기반 및 산업계 지원정책이 필요함
- ② 기술개발 - 영향력과 시장 가치가 높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제조 기술 및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순환경제 기술 등 미래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부문의 투자 확장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표준화,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 ③ 해외투자 - 대기업, 벤처캐피탈,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대상 산업 다각화를 통하여 혁신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ESG 투자 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④ 국제협력 - 글로벌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등에 참여도 제고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순환경제 부문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시장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제질서 전환기 의회외교: 세계 의회외교와 한국의 의회외교 전략

연구배경 및 목적

의회외교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와 논의가 취약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 및 지역별 의회외교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강대국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기술-경제-외교-안보-가치 등이 상호연계되는 복합안보의 부상 속에서 한국 의회외교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세계 주요국 및 지역을 상대로 어떻게 효과적인 의회외교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별 국가별 의회외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의회외교 분야 전문가와 지역전문가가 참여하여 의회외교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의회외교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의회외교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언을 종합하였다. 본문 2장과 3장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 다양한 세계 주요국 및 지역의 의회외교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 4장에서 아세안, 중앙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의회외교 특징분석 및 전략 제언을 포함하였다. 결론에서 세계 의회외교 사례에 대한 종합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의회외교와 정부외교간의 조화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계 의회외교 연구 결과, 각 국가별로 정치 상황과 체제 특성에 따른 의회외교의 개념과 체계, 의회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의회외교와 정부외교의 관계를 '유보(留保)와 상보(相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 전략과 국익외교 관점에서 의회외교 설계 및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익외교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외교에 대한 토론과 국내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국익외교 실현을 위한 의회차원의 외교적 뒷받침 등 의회외교의 목표 설정과 합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규범, 기후환경 등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신형 기술의 부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외교의 다양화와 다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외교 의제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중심으로 세계 의회와 교류하고 소통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회외교는 소프트파워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국 뿐만 아니라 EU, 아세안, 중동,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의회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책임자

박성준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에 따라 산업정책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입법을 통해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녹색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녹색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입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의회외교는 의원 간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간 공식적인 외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를 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의회외교를 통해 주요국의 입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회외교를 통해 파악한 동향과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적절한 입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수출통제개혁법,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산업정책 관련 입법을 살펴보았다. 입법 과정, 주요 내용,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 국내 정치 요인의 분석을 통해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관련 입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녹색전환 입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정책은 유럽기후법,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입법과 관련된 정치적, 제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의회외교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산업정책과 녹색전환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의 녹색전환 관련 의사결정 참여자와 절차가 다양하므로 현지 정보에 정통한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셋째, 의회외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한미의원연맹을 조속히 창설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넷째, 의회외교가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 외교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립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의 관점에서 한반도 의회외교의 의제와 추진 전략을 탐색한다.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연구는 「중장기 국제전략과 의회외교」 과제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 의회외교의 목적은 중장기 미래 지평의 한반도 의제에서 행정부와 독립적인 국회의 이니셔티브를 정립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초당적 최소주의 합의(minimalist consensus)를 가능하게 하는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선정을 위해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의 관점을 도입했다.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연구결과는 한반도 평화구축, 통합의 규범미래를 위한 선결과제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의 제도화를 제시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공진하는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미래 전략의 전제조건, 정책 경로, 중장기 전략 및 단기 우선순위의 연관성을 고려해, 본 연구는 △ 중장기 평화구축을 염두한 군비통제, △ 궁극적인 평화구축의 결과이자 평화 과정과 병행 연계하는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갖는 인권 의제를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로 설정했다. 연구는 두 가지 의제 쟁점 분석 및 평화과정, 인권·이행기정의 주요 사례 교훈 도출, 각 의제 관련 국회 입법 노력을 검토하고 의제 추진 전략으로 군비통제·인권 의제의 통합적 추진, 의제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평화과정 및 이행기정의 사례국의 경험, 현재 국회 내 이념적 양극화의 지형을 고려할 때,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실현의 중요한 조건으로 협의주의적 대화와 협상의 환경 구축을 우선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의제 관련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정치-남북관계-대외적 차원 각각의 총위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군비통제-인권 의제 연계 전략은 협의주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초당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폭넓은 네트워크 전략으로도 의의가 있다.

연구책임자
민보경**연구배경 및 목적**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대응력과 준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구체적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변화의 진단과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 메가트렌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 등 인구요인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는 현재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새로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스마트 성장사회는 기술과 제도 혁신을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를 발전시켜 번영을 가져오는 미래사회 모습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여전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지표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성불평등 지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순위가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분화된 하위 지표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핵심전략과 주요 모니터링 지표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올해 국민과 미래 대화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과 미래 대화를 추진했다.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은 아직 소수지만 조만간 다수가 될 시민으로, 다가올 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이다. 우리말로 창발적 시민으로 호명하고 이들을 찾아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희망하는 선호미래와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주요내용

올해는 부산지역 주민들, 청년정치인들, 원폭피해자, 원전마을 사람들, 다문화이주민 여성들, 가족돌봄청년들, 대안학교 교사, 지방의 인문사회대학원생들, 소년범 변호인, 탈북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 성소수자 등을 만나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부산지역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통해 도시의 선호미래를 들어보았고, 청년정치인들도 만나 우리사회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토론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지방대학의 인문사회대학원 청년들도 만났으며, 대안학교 교사도 만나 교육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원폭피해자와 원전마을 사람들도 만나 미래의 핵 전쟁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았다. 소년범 변호인, 탈북여성과 이들의 자녀들, 성소수자들은 우리사회의 시민에 대한 정의가 매우 협소함을 드러내주었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사회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은 사회적 경고등 역할을 하며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성공을 이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사회가 추구할 가치와 비전,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과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앞으로 더 자주, 적극적으로 이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한국사회가 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이들의 문제를 푸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적대적인 정치행태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극단주의 세력이 정치권의 주류로 부상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당 간의 적대적 대립이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정당 간의 타협이 사라지면서 정책 논쟁이 실종되고 정치의 사회갈등 관리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들은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실험 결과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는 유권자의 양극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유권자 조사결과와 보좌진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 유권자의 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으나 양극화된 열성 지지자들과 정당 활동가들이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호가 정치권에서 대표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열성 지지자들의 선호가 과대대표되는 정치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헌, 법개정 등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수도권-지역 균열, 연금과 세대 갈등 등 기존의 지역-이념의 중첩된 균열 구조와 교차하는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둘째, 정당 내에 다양한 파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적 공천제도를 개혁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대의원제의 실질화 등을 통해 열성 지지자들이 과대대표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정당의 조정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원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연구책임자
이선화

연구배경 및 목적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불평등이 갖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면서 자산불평등 연구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커졌지만 자료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 연구에 비해 연구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가운데 불평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주택정책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일부로서 부동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영역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우선 자산불평등의 국제적 추이와 함께 주택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구 수준에서 자산집중도는 소득집중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주택자산의 집중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택자산의 전체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위해서는 샤플리값을 이용한 자산불평등 요인 분해를 통해 주택 보유 유무 및 주택가격, 거주지역 등이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총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세대의 자산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 유형별 자산 탄력성 추정을 통해 세대 간 자산 대물림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가소유 중심 주거지원 정책의 의의와 주택 금융화에 따른 한계를 평가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주택 금융화 현상 이후 부채 기반 자가보유 정책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가보유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하기보다는 자가보유 지원정책이 주택시장의 자산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양도소득세, 보유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조세정책을 재설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체계 구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주거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대안적인 주택공급 체계 등도 주택이 지나치게 투자자산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완화할 수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상임위에서 다루는 입법 현안 중 많은 이슈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임위의 입법 관련 논의 과정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검토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상임위 입법과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정책들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안된 법률안 중 2023년 2월 28일 기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로 외통위는 3개, 법사위, 국방위, 여가위는 각각 4개씩, 나머지 위원회는 5개씩 키워드가 최종 도출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보된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는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로, 해당 주제들이 전부 미래의제로서 의미를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면서 미래의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상임위별 미래의제 후보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설문 총 315건 중 179건(56.8%)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데이터 분석과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키워드 수준에서 상임위별 미래의제의 범위를 좁혀 나갔다. 다음으로 각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을 검토한 후 미래의제로서 총 14개 분석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상임위별 14개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외국사례,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미래사회 대응 정책: 인구변화와 정부 중장기 전략

연구배경 및 목적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의 인구변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정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인구변화 관련 정부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건강 정책, 국방인력 정책, 이민 정책, 인구감소 지역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초고령사회와 노인건강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 국가 단위의 중장기계획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대응 지표와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와 국방인력 정책을 살펴본 결과,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정권교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며, 국방중기계획의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은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와 이민 정책의 경우, 관련 예산의 상당한 비중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정책적 고려는 미흡하였다. 인구감소 지역 정책을 살펴본 결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연계할 수는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지표를 보완하여 정부정책 평가를 위한 정교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미래대응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변화 관련 예산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의 기획성과 계획성을 강화하고 입법부 차원에서의 국가 중장기 전략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정 훈

공동연구기관

국회도서관

연구배경 및 목적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안보 확보와 신산업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도 부상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환경 및 경관 영향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편중 현상과 계통 용량 부족 등으로 계통 연계 관련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RE100 확산, EU CBAM 도입 등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활용 단계에서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서의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보급(발전)-송배전(계통 연계)-활용(소비) 단계별 발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갈등을 잘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먼저 재생에너지 갈등 관련 언론 기사, 연구 논문,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이미 발생한 갈등 이슈와 갈등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FGI를 통해 보급(발전)-송배전(계통 연계)-활용(소비) 단계별 발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및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또한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갈등 사례, 갈등 대응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와 국내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갈등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적 갈등 중재 기구 설립
- ② 재생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개선
- ③ 갈등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의 공론화 절차 도입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은 재생에너지 할 수 있다. 주요국들은 우선적으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안보 확보와 에너지신산업 선점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1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 저조함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RPS 중심의 보급제도에도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동향과 정책 수단들을 비교해보고,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해외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유형과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수단 도입 동향을 조사하여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제도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전력부문 보급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 전문가 FGI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문 진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전문가 FGI,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상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안하고, 계통안정화 방안 및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 방안

- 국내 RPS 시장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현물시장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시장 교란 등의 문제점과 국내 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비용하락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전 세계적 제도 도입 추세와 함께 시장 규모 예측 가능성과 금융조달의 용이성 및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RPS 제도를 경매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정책적/입법적 방안 논의도 필요함

② 계통 안정화 방안

- 재생에너지 발전의 지역 편중화 현상으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송배전망 적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만을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수요 예측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 개설이 필요함.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에 의한 간헐성 및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반응(DR) 자원의 확대가 필요함

③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방안

-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책 수립시 이해관계자 공론화 및 의견수렴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과 초당적 에너지협정 제도화 방안, 에너지 정책 수립 및 목표 설정 관련 국회 심사권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함

연구책임자
차정미**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패권변동의 역사는 기술혁신이 글로벌 리더십 변화, 국제질서 변화의 요소임을 보여준다. 기존 기술 우위에 안주하는 패권의 관성이 쇠락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화가 패권으로의 부상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한 세기 넘게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차례 '패권 위기' 담론이 부상하였다. 오늘날 중국의 부상과 AI 등 신기술의 연계는 다시 한번 미국의 패권위기 담론과 패권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패권경쟁을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전망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루이스 Mumford(Lewis Mumford)의 기술문명논의를 토대로 오늘날 기술문명 단계를 '신기술(디지털기술)과 새로운 생태문명기술(녹색기술)의 병행 단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술문명단계 논의를 반영하듯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트윈트랜지션(Twin Transition)'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오늘날 기술문명 단계와 국가혁신전략의 핵심인 녹색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녹색기술, 디지털 기술 경쟁의 추세와 미래를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망한다. 특허 출원 수를 토대로 녹색기술, 디지털 기술 혁신경쟁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패밀리 특허 분석을 통해 두 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이 진영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패권의 역사는 과거 부흥을 가져다준 과학기술 분야에 안주하는 경우 도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기술혁신과 패권 흥망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 또한 과거 성장의 기반이 된 기술분야에서 미래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괴적 기술혁신이 도래하는 시기에 기존의 부를 가져다 주었던 기술에 정체되어 미래 혁신 경쟁력의 도태와 위상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성찰해야 한다.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질서는 변화하기 마련이며, 작금의 국제정세는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요국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정치·경제적으로 패권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지배질서가 자유주의인가 보호주의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패러다임 전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내용

이 보고서는 패러다임 개념을 국제질서에 적용하여 “국제질서 패러다임 논의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자리매김하고 시작하였다. 주요국 지도자·정부의 입장, 그리고 학계의 인식을 구분하여 분석하려 하였다. 특히, 정부 및 주요 지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외전략서, 백서, 외교부 등 공식 입장, 주요 지도자 발언 등을 참조하였다. 다만, 지도자 입장과 학계의 입장 간 구분이 어려울 경우 주로 해당 국가 최고 지도자의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기술하려 하였다. 글의 구성은 머리말,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한 각국의 논의, 논의의 특징 및 쟁점, 맺음말로 이루어졌다.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한 각국의 논의 부분의 주요한 분석 대상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그리고 북한이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 보고서가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인식을 잘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적절히 도출해 내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 왔지만 미중 협력의 실마리도 모색되는 현 국제질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의 인식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책임자
정혜윤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변화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시간 의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부의 특정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찬반 판단을 넘어 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주요내용

노동시간 법제 과정을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년~1988년), 작용과 반작용의 시기(1989년~1997년), 법제 제도화(1998년~현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① '노동시간 단축(규제 강화)'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규제 완화)'라는 의제의 성격, ② 논의의 장(국회 및 기타 공간) 또는 주체의 성격, ③ 단독 의제인지 병행 의제(집단적 노동관계법) 인지 여부 등을 통해 시기별 법제 변천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과 2장은 연구의 문제의식과 배경, 시기 구분의 세 차원을 밝힌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시기(1953~1988년)로 노동시간 법제의 형식이 실질적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4장은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 '단축'과 '유연화' 조치라는 중대 법제정이 있었던 작용과 반작용의 두 번째 시기(1989~1997년)를 분석한다. 5장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03년 주 40시간제와 2018년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정치과정의 특징을 담았다. 6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시간 법제 논의가 권위주의체제 유산이 연결되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 노사 자율과 자치 영역은 억제하는 대신 국가 행정 규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꾀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논의는 개별노동관계법 개정을 넘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뿐 아닌 산업정책 등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획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긴축, 3高(금리·환율·물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시장의 위축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악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가 경제체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phase)별 관련 법률 및 정책 탐색과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정비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사항 탐색과 제안을 이뤄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이슈인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및 기술창업 활성화, R&D 및 기술료 징수 문제, CVC, 세컨더리펀드, M&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주요 도전과제와 관련 조직,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 심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단계별 주요 정책·입법 이슈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제언들은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물에 근거한 실질적인 국회 내 법률 제·개정 추진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물에 기반하여 중기부 등 연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의 정책 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수시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01

연구책임자
박성원

혐오와 차별의 미래: 정책과 입법적 대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규제법안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임기만으로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하였다. 2007년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된 데에는 우리사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차별과 혐오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주요국 입법 동향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별과 혐오의 미래 추이를 전망하고 한국 사회에서 시사하는 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02

연구책임자
유희수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본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정리한 후, 관련 논의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 제도 내,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재구조화 방안으로, ① 최저소득보장, ② 최저연금보장, ③ 보편적 기초연금 등을 중장기적 관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03

연구책임자
여영준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 패러다임 확산과 지능정보사회 도래 속, 기술환경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는 AI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 해외 주요국(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인재양성 관련 교육개혁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탐색하고자 했다.

국회미래의제 23-04

연구책임자
허중호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간호-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일본의 “개호보험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 등 사회적 부담의 급증 및 노인 삶의질 저하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돌봄이거나 병원 중심의 치료라는 이분법적인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보건 의료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료-간호-돌봄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介護, 간병과 수발)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요 개호서비스 중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살펴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05

연구책임자
김태경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분석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한은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협력에서 다각적 발전을 축적했으며 당국간, 당국-민간 사이 협력이 지속되면서 특유의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 진화하였다.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안보적 위기 고조, 불신 심화가 다른 영역의 교류협력, 접촉의 지속성을 압도하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정치적 안정성, 정당성에 바탕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성장한 민간 행위자 조직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공존·협력을 위한 남북한 내 기본법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06

연구책임자
민보경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력정책 방향

본 연구는 농어촌 인구위기 해결방안으로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미래지향적 이슈를 발굴하고 접근 방향을 모색하였다. 농어촌 인력정책 방향은 농업과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속적인 저출생, 비혼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적 흐름을 상수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적응 전략을 수립하되, 급격하게 변화하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외국인 등 인구 유입을 통한 농어업 인력 확충 및 스마트 농어촌 조성과 스마트 농어업을 위한 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접근으로 농어업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07

연구책임자
이상직

노동안전보건의 정치사회학, 1953-2021: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 의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가?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과제가 어떠한 식으로 다루어졌는지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역사적인 흐름으로 개괄하였다.

첫 번째 시기(1953-1987)는 노동안전보건 제도의 기본 형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된 시기이며 두 번째 시기(1988-2006)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정치사회적 전환기에서 노동안전보건관련 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국면에서 제도의 규범력이 약해지기도 하는 등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안전보건의 제도적 틀이 구체화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2007-2021)는 고용관계 중층화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래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몇 차례 중대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안전보건의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확장된 때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은 보건의료전문가와 피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흐름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일반의 흐름으로 확장·심화된 중장기적인 경향을 배경으로, 2000년대 이래 노동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재난의 위험성을 점차 많은 이들이 체감하게 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나아가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회미래의제

23-08

연구책임자
김은아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강화 중장기 전략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광물의 공급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핵심원자재의 주요 수입국으로 중국을 두고 있으며, 일부 원자재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가 90%를 초과한다. 이는 국가전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큰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핵심원자재 공급망 이슈와 그에 따른 국내 산업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시나리오로 수렴하는 주요국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여 핵심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에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원자재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경로를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환단계에 요구되는 국가 전략을 고찰하고, 전환단계 및 녹색성장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현황에 기반하여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회미래의제 23-09

연구책임자
이상직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 및 실천사례 연구

이 연구는 UN을 중심으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해외 주요지역의 탈시설 정책 실천 사례를 검토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UN은 2006년에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한 이래 일관되게 장애인의 탈시설을 강조하였으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해설서인 일반논평을 여덟 차례, 특정 사안에 대한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다섯 차례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에 탈시설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미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1973년 재활법 개정안이나 1990년 장애인법 등을 근거로 한 소송 운동을 통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왔다.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과 실천 사례는 탈시설 과정을 압축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회미래의제 23-10

연구책임자
이승환

공간컴퓨팅과 AI시대, 플랫폼 진화와 정책이슈 전망

플랫폼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무형의 토대를 의미하며 파괴적 혁신을 통해 디지털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은 진화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플랫폼의 진화 방향을 검토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 이슈를 조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은 지능화, 공간화, 분산화, 융합의 추세로 진화 중이며 플랫폼의 지능화로 독점, 시장지배력 전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공간 및 분산 플랫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정책 이슈가 발생한다. 또한, 사물융합 플랫폼의 확산으로 새로운 플랫폼에 기기가 연결되며 개인정보 유출,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 방향을 고려하고 제품·서비스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발전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의제

23-11

연구책임자

김은아

녹색전환기술 글로벌 영향력 향상 전략: 세계질서 재편의 맥락에서

녹색전환의 중장기 전략에서 기술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일 부처 단위에서 수립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경제적인 현황 및 세계질서 재편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녹색전환기술 전략은 초당적인 사안으로, 국회는 범부처 단위의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본 과제는 그러한 논의에 필요한 기반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① 녹색전환 기술 중에서 기존의 녹색기술 강자가 집중한 기술영역과 중국이 후발주자로서 특히 주력하고 있는 기술군을 식별하고, ② 그 기술영역에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하며, ③ 한국이 이러한 녹색기술 지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고, ④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중점 투자 기술 및 산업 영역 발굴 등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12

연구책임자

김태경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국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응하여 원폭피해자들 관련 입법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내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가장 논쟁이 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후손을 원폭피해자 정의에 포괄하는 문제는 일본 사례, 관련 부처 입장 등에 비추어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비핵평화공원 조성 등 국가 주도의 추모기념 사업의 의무화에 대한 요구도 중요한 개정안의 쟁점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국가적 인정과 통합은 이주, 식민, 전쟁, 피폭, 분단, 한일관계, 평화구축 등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원폭피해자들에 가진 책임은 이들의 귀환 이후 원폭피해자 문제의 중층적 역사성, 정치적 함의를 마주하는 대신 한일협정 협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인정 투쟁'을 오랜 무관심과 소외 속에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한반도, 역대 비핵평화 미래비전의 관점에서, 국회는 인류 유일의 핵무기 참사를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갖는 상징적 지위에 눈을 돌리고 이들의 기억을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인정, 후손들에 이르는 고통을 치유하는 입법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미래의제 23-13

연구책임자
김태경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수평적 민간 협력, 기본법제 정비, 초당적 최소합의

탈냉전기 남북관계는 부침을 반복하며 30여년에 이르는 상호 접촉, 교류, 회담, 협상의 경험을 발전시켜 왔으나, 2000년대 이후 국내 ‘통일인식조사’ 결과는 북한 문제,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피로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통합·평화과정의 비교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평화과정의 모든 갈등당사자들의 폭넓은 포괄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평화구축의 대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서 민간 거버넌스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함의를 강조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민간 거버넌스의 성격 및 진화의 측면에서 영역별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조명했으며 탈냉전 초창기부터 장기간 현장에서 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한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활용함으로써 정부 당국이 아닌 민간 행위자, 아래로부터 접근을 강조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14

연구책임자
차정미

세계 경제안보의 실제와 한국 경제안보에의 제언 - 경제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거버넌스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지정학적 위기의 확대 속에서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는 경제의 안보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강력한 경제안보 구호 속에서도 실제 경제안보에 대한 정의와 접근은 개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전략의 특징과 핵심 내용, 경제안보 추진 거버넌스와 작동의 실재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한국형 경제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15

연구책임자
이상직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조사틀 검토

장애인 ‘탈시설’이 2010년대 중반 이래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탈시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쟁점을 조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과 주요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조사할 때에 참고할 수 있을 측정 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탈시설 논쟁에 일정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조사 연구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국회미래의제

23-16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노동: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연구책임자

이상직

이 연구는 ‘탈시설’ 사회라는 지향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려는 탐색 작업이며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하였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좋은 점은 ‘출근한다는 것’ 자체이고, 힘든 점은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궁금한 점은 ‘계속 일할 수 있는지’였고, 바라는 점은 ‘계속 일하고 싶다’였다. 이들의 경험과 생각은 ‘일’의 의미를 되문게 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였다.

국회미래의제

23-17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과 국내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정 훈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로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내 공급망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국 중심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적 특성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산업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의된 관련 입법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기술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변화 - 역사적 고찰과 미중 신흥기술 경쟁 분석

연구책임자
차정미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패권의 이동과 밀접히 연계되며 오늘날 세계질서 전환기 미중 전략경쟁 또한 미래 패권을 결정하는 요소로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을 강조한다. 미중 양국 모두 향후 10년을 미래 글로벌 리더십 경쟁의 관건기로 강조하고 있으며 핵심신흥기술을 중심으로 한 패권경쟁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기술문명 단계를 <신기술 단계의 심화와 미래 생태기술 단계의 부상> 시기로 규정하고, 호주전략정책연구원(ASPI)의 핵심 기술 추적 분석(critical technology track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등 신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녹색 기술 등 생태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4. 연구실적 목록

기본보고서

국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행한 연구결과물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보고서		
23-01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허중호
23-02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4개년 트렌드 분석 보고서-	허중호
23-03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개인의 삶 관점 미래 사회 전망	여영준
23-04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전략	민보경
23-05	한국 노동정치 의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정혜윤
23-06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표준화,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김은아
23-07	국제질서 전환기 의회외교: 세계 의회외교와 한국의 의회외교 전략	차정미
23-08	경제안보와 의회외교	박성준
23-09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와 전략	김태경
23-10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2023	민보경
23-11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	박성원
23-12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박현석
23-13	주택자산의 불평등 진단과 중장기 정책 방향	이선화
총서		
23-01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유희수
23-02	미래사회 대응 정책: 인구변화와 정부 중장기 전략	민보경
국회공동연구보고서		
1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와 갈등 대응 방안 연구	정 훈
2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 훈
3	미중 기술혁신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	차정미
4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기획연구보고서		
23-01	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과정: 주요 변화 국면 비교	정혜윤
23-02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여영준

수시연구보고서

국회 내 미래의제에 대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수시 대응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결과물

국회미래의제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23-01	혐오와 차별의 미래: 정책과 입법적 대안들	박성원
23-02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유희수
23-03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여영준
23-04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간호-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일본의 “개호보험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중호
23-05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분석	김태경
23-06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력정책 방향	민보경
23-07	노동안전보건의 정치사회학, 1953-2021: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 의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가?	이상직
23-08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강화 중장기 전략	김은아
23-09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 및 실천 사례 연구	이상직
23-10	공간컴퓨팅과 AI시대, 플랫폼 진화와 정책이슈 전망	이승환
23-11	녹색전환기술 글로벌 영향력 향상 전략: 세계질서 재편의 맥락에서	김은아
23-12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김태경
23-1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수평적 민간 협력, 기본법제 정비, 초당적 최소합의	김태경
23-14	세계 경제안보의 실재와 한국 경제안보에의 제언 -경제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거버넌스-	차정미
23-15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조사를 검토	이상직
23-16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 노동: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이상직
23-17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과 국내 대응방안 연구	정 훈
23-18	기술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변화 -역사적 고찰과 미중 신기술 경쟁 분석	차정미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주요 미래이슈 또는 기존(현행)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작성한 심층분석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호수	제목	작성자	발간일
60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2023.01.02.
6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박성원	2023.01.09.
62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2023.02.27.
63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2023.03.06.
64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2023.03.20.
65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2023.04.10.
66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2023.04.17.
67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	2023.05.01.
68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2023.05.15.
69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김현곤	2023.05.22.
70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2023.06.05.
71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2023.06.26.
72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2023.07.24.
73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한·미·일 비교분석	정혜윤	2023.07.31.
74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2023.08.07.
75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	2023.08.14.
76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2023.08.28.
77	“트리플 트랜지션 (Triple Transition)”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차정미	2023.09.04.
78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 훈	2023.09.11.
79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	2023.09.25.
80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부문 정책 의제	이선화	2023.10.16.
81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김은아	2023.10.30.
82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김태경	2023.11.06.
83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민보경	2023.12.04.
84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채정	2023.12.11.

- Futures Brief: 국회 차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입법 전략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제시한 낱장형 보고서

Futures Brief			
호수	제목	작성자	발간일
23-01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반도체-	박성준	2023.01.16.
23-02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정혜윤	2023.02.06.
23-03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민보경	2023.02.20.
23-04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박현석	2023.03.13.
23-05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박성원	2023.04.03.
23-06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허종호	2023.05.08.
23-07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이선화	2023.05.30.
23-08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	정 훈	2023.06.19.
23-09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	박상훈	2023.07.03.
23-10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차정미	2023.07.10.
23-11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	김은아	2023.07.17.
23-12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김태경	2023.07.31.
23-13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	여영준	2023.08.21.
23-14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허종호	2023.09.18.
23-15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이승환	2023.10.04.
23-16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박성준	2023.10.16.
23-17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여영준	2023.10.23.
23-18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	이상직	2023.11.13.
23-19	일본 「성육기본법」(成育基本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	허종호	2023.11.20.
23-20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성문주	2023.11.27.
23-21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박현석	2023.12.18.

단행본

- 국민들의 미래 문해력과 미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과물

단행본		
발간번호	제목	발간일
23-01	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나, 성숙사회나	2023.07.31.

2023년 주요 활동

1. 주요행사	48
2. 미래기고	54
3. 언론보도	57

1. 주요행사

국가현안 대토론회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국가 차원의 주요 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과 정부부처 및 각계의 전문가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 연속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제고하였다.

회차	일시·장소	주제
1	2023.03.21.(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2	2023.04.11.(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과제는?
3	2023.04.25.(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4	2023.05.09.(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보다 해야 하는가?
5	2023.07.13.(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6	2023.07.19.(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7	2023.08.30.(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사진 1.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사진 2.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국가현안 대토론회 전문기자 간담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에 앞서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각 분야별 전문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및 여론을 청취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및 대국민 관심과 공감대를 환기하였다.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토론회의 세부 주제로 반영하고, 참석 전문기자를 토론자로 섭외하는 등 국가현안 대토론회와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회차	일시·장소	주제	관련 토론회
1	2023.02.15.(수)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연금개혁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2	2023.03.02.(목)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기후위기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3	2023.03.29.(수)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인구위기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4	2023.04.18.(화) 국회 본청 3식당 별실	교육개혁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5	2023.06.16.(금) 국회 본청 3식당 별실	세계질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6	2023.06.21.(수) 국회 본청 3식당 별실	벤처· 스타트업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7	2023.08.08.(화) 달개비	지방소멸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8	2023.10.06.(금) 국회 강변서재	성과보고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

사진 3.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전문기자 간담회

사진 4.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



1. 주요행사

의원실 공동 주최 세미나·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연구단체, 의원실 등과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에 대해 학술적으로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도모하였다.

연번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
1	2023.06.08.(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국회섬발전연구회, 한국섬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정책학회
2	2023.08.17.(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장동혁 의원실,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3	2023.09.05.(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구위기 대응 병역자원 미래전략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조정식 의원실
4	2023.09.08.(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통합·평화과정 주요 사례국의 경험	국회독일합치연구포럼
5	2023.10.05.(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미중경쟁 시대 과학기술 외교와 의회의 역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6	2023.12.01.(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1회 행복 포럼	국민총행복정책포럼,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윤호중 의원실, 박성준 의원실, 최연숙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를원
7	2023.12.13.(수)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	혐오와 차별의 미래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사진 5.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사진 6.
제1회 행복포럼



기타 주요활동

2023.03.07.



2023년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2023.03.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무협약식

2023.04.26.



국회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

2023.04.26.



뉴스1 미래포럼 2030:
포스트 팬데믹 시대, 회복 위한 해법 찾기

기타 주요활동

2023.05.30.



개원 5주년 기념식

2023.05.31.



NAFI-UN DPPA Youth Dialogue:
Futuring Peace in Northeast Asia

2023.07.18.



2023년도 연구과제 중간보고회

2023.08.28.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미래의제 라운드테이블:
강대국 경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강국의 역할

2023.09.05.



녹색전환을 이끄는 의회의 역할:
한-EU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2023.09.13.



말레이시아 첨단산업기술진흥원(MIGHT) 협력 논의

2023.10.05.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2023.10.24.



2023년도 연구자문위원회

2023.11.09.



2023년도 연구과제 최종보고회

2023.12.18.



2023년도 청년미래위원회 수료식

2. 미래기고

입법부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의 시각을 반영한 의견을 기고문의 형태로 소개하는 '미래칼럼'과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뉴스1과 공동기획을 통해 매주 게재하는 '미래생각'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수행하였다.

미래칼럼 현황			
연번	제목	작성자	게재일
1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2023.01.26.
2	온라인 플랫폼의 미래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2023.02.02.
3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23.02.09.
4	초고령사회, 노인빈곤 해소부터 시작해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23.02.16.
5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은?	박덕홍 (정보위원회 위원장)	2023.02.23.
6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로 확대하자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023.03.02.
7	세계질서 주도할 자급률 강국으로 거듭나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3.30.
8	2030 부산엑스포, 세계의 대전환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3.04.06.
9	1.5도 목표 지킬 수 없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포기 선언'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23.04.14.
10	기후위기 시대와 정치개혁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3.05.11.
11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 거버넌스 논의 필요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06.01.
12	기후위기와 농어업의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성	서삼석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06.08.
13	군 무인기 개발, 부침없는 성공의 조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10.05.

미래생각 현황			
연번	제목	작성자	게재일
1	지방시대의 청년과 대학	민보경	2023.01.11.
2	행복과 삶의 질, 레토릭을 벗어나자	허종호	2023.01.17.
3	주택정책의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선화	2023.01.25.
4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금 필요한 일	정 훈	2023.01.31.
5	정치가다음에 관하여	박상훈	2023.02.07.
6	원자재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 미래의 물질 순환	김은아	2023.02.14.
7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	여영준	2023.02.21.
8	정치개혁은 정당개혁부터	박현석	2023.02.28.
9	우리는 어떤 (불)평등을 원하는가?	이상직	2023.03.08.
10	미래시제의 평화구축과 피폭자의 핵전쟁의 기억	김태경	2023.03.14.
11	중국 양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차정미	2023.03.21.
12	미래의 연금제도 틀을 바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유희수	2023.03.28.
13	정책대안이라는 관성 혹은 습관	정혜윤	2023.04.04.
14	나는 인간이면서 인공지능	박성원	2023.04.11.
15	메타와 멀티의 시대, 공간과 장소의 의미	민보경	2023.04.18.
16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허종호	2023.04.25.
17	소득·고용 분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제 제언	이선화	2023.05.02.
18	탄소중립, 이제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	정 훈	2023.05.09.
19	빈자를 위한 정치	박상훈	2023.05.16.
20	녹색전환에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김은아	2023.05.24.
21	챗GPT가 불러온 변화의 본질과 대응전략	여영준	2023.05.30.
22	영혼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박현석	2023.06.07.
23	국가 소멸론에서 국가론으로	이상직	2023.06.13.
24	한반도 미래를 위한 합의, 누구와 어떤 의제부터 할 것인가	김태경	2023.06.20.
25	'서로 다른 입장'의 디리스킹과 미중관계의 미래	차정미	2023.06.27.
26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협력	박성준	2023.07.05.
27	나는 모든 공권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혜윤	2023.07.12.
28	돌봄노동자들의 붕괴	박성원	2023.07.19.
29	인구절벽과 톨레랑스	민보경	2023.07.25.
30	카고 컬트(cargo cult): 미래전망에 대한 환상 깨기	허종호	2023.08.02.

2. 미래기고

미래생각 현황			
연번	제목	작성자	게재일
31	3대 구조개혁에 앞서 정치적 의사결정구조 개혁 이뤄져야	이선화	2023.08.08.
32	과학기술 R&D 혁신, 신뢰문화 조성부터	정 훈	2023.08.16.
33	누가 양극화 국회를 이끄냐	박상훈	2023.08.22.
34	과학적 사실과 정치적 결정 사이의 거리	김은아	2023.08.30.
35	AI 시대 학교교육의 디지털전환 방향과 과제	여영준	2023.09.06.
36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지방정부의 무능 때문일까?	박현석	2023.09.12.
37	직업계고와 능력주의	이상직	2023.09.20.
38	현재를 낮설게 하는 미래, 그리고 과거와의 대화	김태경	2023.09.26.
39	생성형 AI 시대, 중국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차정미	2023.10.04.
40	생성AI 혁명시대, 슈퍼 개인의 탄생과 저작권 이슈	이승환	2023.10.10.
41	그들만의 육아휴직	이채정	2023.10.17.
42	창의성 향상 위해 자기주도학습역량 계발해야	성문주	2023.10.24.
43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박성준	2023.10.31.
44	우리나라는 언제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유희수	2023.11.07.
45	정부위원회서 노동조합 배제가 우리 삶과 밀접한 이유	정혜윤	2023.11.15.
46	고립의 미래	박성원	2023.11.21.
47	메가시티는 메가시티다	민보경	2023.11.29.
48	지역사회 의료·간호·돌봄의 코디네이터 필요	허종호	2023.12.06.
49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국회의 예산권	이선화	2023.12.12.
50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선결 조건	정 훈	2023.12.19.
51	막스 베버의 정치가론	박상훈	2023.12.26.

3. 언론보도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활동, 행사 등이 주요 언론사를 통해 다수 보도되며 기관 홍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제고 하였다.

주요 매체 보도내용		
언론사	주요내용	보도일
KBS	“한국 정치 언어영역 70점”... ‘정치 막말’ 없애려면 카메라 줄여라?	2023.01.09.
	코로나19 영향 시민 행복지수 3년 연속 하락... 울산 중구 꼴찌	2023.01.12.
	[기후K] 기후 석학이 왜 ‘한국 경제’를 걱정할까	2023.01.27.
	“만족하지만 떠난다” 부산 청년 정책 효과 높일 방안은?	2023.02.29.
	챗GPT가 만든 다큐, 시사기획창 ‘시혁명-챗GPT에 시를 묻다’	2023.08.01.
	‘의대 신설 증원’ 애쓰는 경북도... “입법 정치 환경은 긍정적”	2023.12.27.
MBC	PD수첩, 인구절벽 1부 -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2023.02.14.
조선일보	정년 연장 이후, 퇴직 53세 → 49.3세로 오히려 빨라져	2023.02.20.
동아일보	한일-한중은 있지만 한미는 없는 의원연맹... 국회, 본격 시동	2023.04.27.
중앙일보	영국 100만인데 한국 1,000만 당원... 거품 낀 당, 팬덤에 잡혔다	2023.05.02.
	‘양평’은 없고 ‘양편’만 있다... 또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2023.07.11.
JTBC	“회사 어렵다” 떠밀려 나가는 직원들... 산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2023.08.17.

사진 1.
MBC(2023.02.14.)

2021	청년 가구 수도권 전입 사유			
	남성		여성	
	20-24세	25-29세	20-24세	25-29세
직업	41.4	48.0	45.0	43.3
가족	6.2	10.2	6.3	11.4
주택	16.7	26.0	19.0	29.2
교육	24.0	3.6	17.5	2.2
교통	5.6	5.9	6.4	7.1
건강	0.3	0.2	0.2	0.3
기타	5.9	6.0	5.7	6.5

사진 2.
KBS(2023.08.01.)



2024년 연구사업

1. 연구사업 추진방향	60
2. 연구과제 목록	62

1. 연구사업 추진방향

추진방향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 제시

정책 반영도 및 현장 수용도가
높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중점연구

과학적인 미래 예측·분석과 미래연의 고유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를 통하여 국회 입법과 정책 방향 제시

연구기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목소리와 삶의 모습을
조사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가가 그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확산

주요 연구성과를 학술행사, 간행물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책고객 대상으로 적시에 효과적으로 공유 확산하여 연구성과의
대국민 인식도 및 정책 반영도 제고



주요 추진사항	
추진사항	주요내용
미래예측 및 분석 	국가중장기발전전략 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탐색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분석 추진 - 국회 개원 이후 미래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보고서 제공 -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책과 입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중장기 미래예측 제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목표지향 기반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추진 - 미래비전을 실현하고 중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 제시 - 정책 반영도 및 현장 수용도가 높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국제전략 	글로벌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망을 구축하고 안보·기술·통상 외교 관점에서의 중장기 국제전략 및 의회외교 전략 마련 - 국제전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의 전문가 그룹과 지역별·아젠다별 토론 및 교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 국제전략 분야 주요 이슈로서 안보·기술·통상 외교의 관점에서 중장기 국제전략 및 의회외교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국회 미래의제 지원 	미래의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활동과 인식 및 정책선호를 분석하는 한편, 미래연구 수요에 적시 부응할 수 있는 수시연구과제 추진 - 제22대 국회에 미래의제 관련 입법활동 분석 결과 제공 - 국회에서 논의되는 미래의제에 대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수시 대응하여 단기 미래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미래연구 결과물을 연중 제공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다각도의 분석과 현실적 정책 제언을 위한 조사 연구 추진 - 한국인의 행복연구를 통하여 다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삶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심층분석 연구 추진 -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에서는 미래이슈가 발생한 지역에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 세미나 등을 포함한 조사 추진
성과확산 	일반 국민과 정책고객 대상으로 기관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하고 국회의 미래정책역량과 국민의 미래문해력 제고 추진 - 「국가미래전략 Insight」(심층분석형 브리프) 및 「Futures Brief」(날장형 브리프)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일반 국민과 정책고객에게 공유·확산하는 한편, 「국회미래의제」(수시연구보고서)를 국회 의원 및 상임위에 제공 - 매주 게재되는 미래기고(연구진 및 국회의원과) 토론회 개최를 통해 미래연의 국회의 미래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플랫폼 역할 공고화 - 청년세대로 구성된 '청년미래위원회'(2021년~)를 지속 운영하여 청년세대의 미래인식을 연구 과정에 반영하고 청년의 시각으로 기관의 연구성과를 공유·확산

2. 연구과제 목록

사업명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중점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유희수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기술패권경쟁 시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미래와 전략	여영준
	생성시 혁명시대 미래정책 연구	이승환
	인구감소시대 지역거점 육성 전략	민보경
	미래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세입 부문 의제 연구	이선화
	교육혁신 중장기 전략 연구	성문주
	노동행정의 미래	정혜윤
	순환경제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전략	김은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 연구	정 훈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연구	이채정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입법전략	허종호
국제전략	중장기 국제전략과 의회외교	차정미
	신흥기술과 미래안보-기술외교 전략	차정미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중장기 국제전략	박성준
	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	김태경
국회 미래의제 지원	국회의 미래의제 입법활동 연구	박현석
	국회 미래의제 수시 연구	유희수
연구기반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민보경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박성원
	한국인의 행복연구	허종호
성과확산		
성과확산	연구기획 및 지원	유희수
	연구 성과확산	김병수

부록

기관소개	64
조직 및 인원	66
연혁	37

기관소개

설립목적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미션 mission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

비전 vision

국가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3대 경영목표

1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2

미래연구 플랫폼 역할
강화 및 정책활용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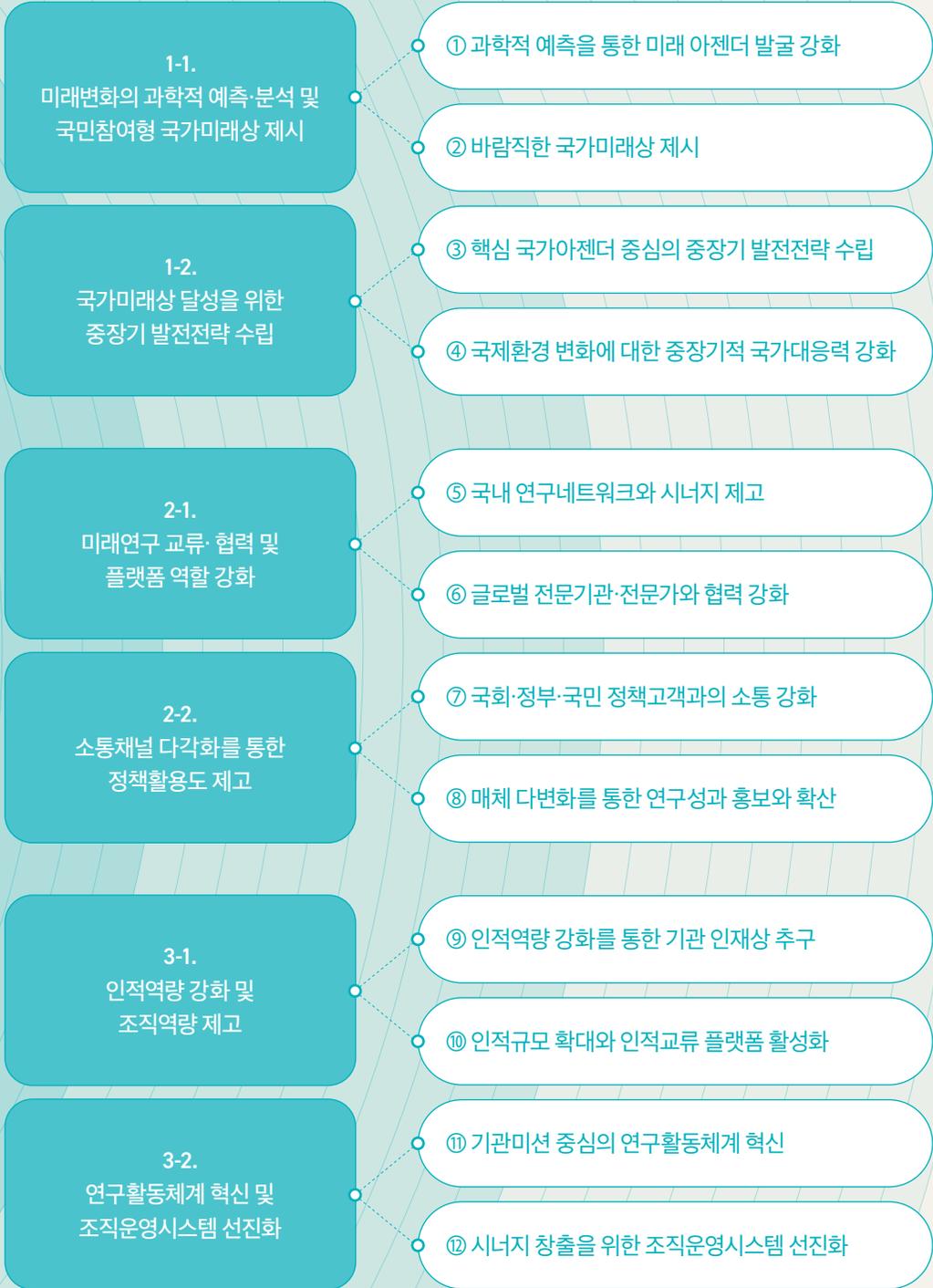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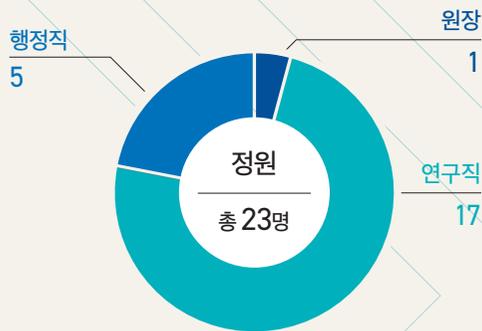
조직역량 제고 및
경영체계 선진화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조직 및 인원



※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 및 비정규직 제외, 2024년 5월 기준

연혁



2017~2018

- 2017.12.12.
「국회미래연구원법」 공포
- 2018.01.10.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 조동성)
- 2018.03. 21.
국회미래연구원 초대 이사회 구성
(이사장: 김선욱)
- 2018.05.21.
국회운영위 초대위원장(박진) 임명동의안 가결
- 2018.05.28.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개최

2020~2021

- 2020.05.27.
국회의장 제2대 원장(김현곤) 임명
- 2020.11.27.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국회의장 직속) 위촉
- 2020.12.24.
국회미래연구원 제2대 이사회 위촉(이사장: 박명광)
- 2021.12.08.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 발간



2022~2023

- 2022.04.05.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 개최
- 2023.03.~08.
대한민국 국회 주최 “국가현안 대토론회” 총 7회 주관 개최
- 2023.07.31.
단행본 「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냐, 성숙사회냐」 발간
- 2023.10.06.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 개최



2023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4년 5월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문 의 T 02-786-2190 | F 02-786-3977 | H www.nafi.re.kr

디자인 (주)디자인집 www.designzip.co.kr

ISSN 2951-0554

•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미래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2024



국회미래연구원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786-2190

www.nafi.re.kr

ISSN 2951-0554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